

5월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입법현황과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자체요약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세종, 민의의 결’	1
1-2. 세종시, 광역시 최초 ‘고지서 AI자동화 시스템’ 도입	2
1-3. 세종시, 전국 첫 ‘AI 경관심의 자가점검’ 도입	2
1-4. ‘강호축도 한반도 KTX도 청주行?’. KTX 세종역 신설론 재점화	3

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2-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6
2-3.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7
2-4.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3. 국회 입법 발의 현황

3-1~20.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0~15
-----------------------------------	-------

4. 국내 정책 정보 및 이슈

4-1.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17
4-2.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6월 즉시 시행	18
4-3.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부전문관’ 신설	19
4-4.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식비 부담 낮춘다	20

5. 해외 정책 정보

5-1. 영국... AI는 공무원 대체가 아닌 공무원의 속도를 10배 만든다	22
--	----

0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세종, 민의의 곁'

-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체계 바꾸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

-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에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원, 운생동건축사사무소, 다울건축사사무소팀이 출품한 '세종, 민의의 곁' (비움과 흐름으로 엮는 민의의 중심)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에서 "당선작은 정부 청사와 금강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 축을 중심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대응한 점이 매우 우수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사무처는 당선팀에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수행권을 부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향후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선작 '세종, 민의의 곁'



1-2. 세종시, 광역시 최초 '고지서 AI자동화 시스템' 도입

- 세종시는 NH농협은행과 손잡고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 현재 지방세업무 대부분은 전산화지만,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등 일부 신고 세목의 경우 수기 고지서 사용을 병행하고 있다. 수기 고지서는 납세자가 수기로 작성한 과세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인식 오류나 오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시와 NH농협은 지난 18일 시청 세종실에서 인공지능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세입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다 체계적인 납세 정보관리로 민원 응대와 사후 확인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출처 : 충남일보(<https://www.chungnamilbo.co.kr>)

1-3. 세종시, 전국 첫 'AI 경관심의 자가점검' 도입

- 세종시는 NH농협은행과 손잡고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관심의를 다수의 건축물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지만, 제출 서류의 미비와 작성 오류 등으로 전체 심의의 약 70%가 보완 요청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반복적인 수정 부담은 물론 심의 지연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심의자료 보완 요청률이 기존 7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심의 처리 기간도 평균 30일에서 5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1-4. "강호축도 한반도KTX도 청주行?".

KTX 세종역 신설론 재점화

- 행정수도 세종 직결 빠진 철도망 논란... "충북 중심 재편" 반발
- 오송 허브화·청주공항 연계 강화 흐름에 "세종 또 소외되나" 우려
 - 민주당은 19일 목포~광주~익산~청주~충주~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경부축 중심 철도망에 강호축을 추가해 국토를 가로지르는 'X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강호축은 경부축 중심 국토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축 개념으로, 강원·충북·세종·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 등 8개 시도가 포함된 프로젝트다. 하지만 공개된 철도망 구상은 사실상 오송·청주 중심 축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 내부에선 "행정수도를 말하면서 정작 국가 간선철도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행정수도 세종 연결 전략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이번 강호축 공약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KTX 세종역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 직접 연결망이 제외돼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경우 정치권 역시 세종역 추진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 세종 입장에서 강호축과 한반도 KTX 논의가 단순한 철도사업을 넘어 "행정수도를 국가 간선철도망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KTX 세종역 논쟁이 다시 충청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 강호축과 한반도 KTX 논의가 확대될수록 행정수도 세종의 국가 간선철도망 직접 연결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0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

- 이 규칙은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상담 권장 시간)

- ①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원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최대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상담시간이 15분을 경과하면 상담이 5분 이내로 종료됨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상담을 지속한 경우에는 상담을 종료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행위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민원현장의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 ①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한 경우(퇴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개월간 민원현장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민원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최대 20분 이내로 한다.
- 고소·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한 경우에는 3개월간 민원현장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개정 이유

-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운영 및 범죄예방 근거 마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파크골프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제12조(안전교육 등)

-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및 폭행·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수칙의 숙지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우선 이용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3.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최근 무인점포의 수가 증가하고 상주 인력이 없는 특성상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내 용

○ 제3조(책무)

- ①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사업 등)

- ①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보급
 2.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3.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요내용

- 무인점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 무인점포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4.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창원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 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내 용

○ 제2조(정의)

1. “노인교육”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하며, 디지털 생활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7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연구·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03

국회입법

발의현황

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대표발의자 : 김문수 / 발의일 : '26.04.23 / 의안번호 : 221856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 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산업단지나 대학캠퍼스는 많은 유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소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사전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하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일 : '26.04.22 / 의안번호 : 2218561

3-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 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대표발의자 : 신성범 / 발의일 : '26.04.21 / 의안번호 : 2218473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대표발의자 : 이달희 / 발의일 : '26.04.28 / 의안번호 : 2218652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대표발의자 : 신성범 / 발의일 : '26.05.13 / 의안번호 : 2218951

3-1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대표발의자 : 김미애 / 발의일 : '26.05.08 / 의안번호 : 2218893

3-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04

국내정책

정보이슈

4-1.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6월 즉시 시행.. 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다.
-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의 제도가 없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

4-2.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부전문관' 신설

○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전했다.

-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 신설

: 먼저,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 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담당급인 5급 이상에서 실무급인 6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이상으로

: 부처 업무 중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며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 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4-3.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 법제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 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법제처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 제안 창구’를 마련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제안된 안건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정비 제안창구’는

- *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하고,
- *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 *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제안주체 : 지방정부(지역교육청 포함) 및 지방의회

제안대상 : 현장 적용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제안방법 : 정부입법지원센터 → 자치입법 지원 → '법령정비 제안창구' 코너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역교육청의 경우 온나라 공문으로 접수

4-4.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식비 부담 낮춘다

- 5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 대상. 월 최대 4만원 지원.
 -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외식업체 이용시 할인. 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
- 5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커진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에 참여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다. 참여 기업은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월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 (<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05

국외정책

정보이슈

5-1. 영국 행정 AI자동화(GovTech)

- AI는 공무원의 대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속도를 10배로 만든다.
- 해외 행정 AI의 가장 현실적인 성과는 거창한 예측모델보다 반복 업무 자동화, 요약, 분류, 검색, 안내, 문서 검토 보조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반복 질문을 AI가 먼저 처리하고 공무원은 예외 상황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 영국은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제도화한 국가다. 2024년부터 공공부문 생성형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문서 요약, 정책 초안 작성, 민원 응답 보조 등 내부 행정 업무에서 AI활용을 공식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GovTech 전략이다.
- 일부 지방정부는 AI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해 2시간 회의 후 정리 작업에 반나절 걸리던 업무를 10분 내 검토 수준으로 바꿨다. 지원 신청서의 누락 항목을 AI가 사전 점검해 담당자의 반복 확인 업무를 줄이거나, 허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 검색과 유사 사례 정리를 자동화해 민원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 한국 지방정부가 여기서 배워야 할 핵심은 ‘챗봇 하나 도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AI를 민원창구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프로세스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회의록, 보고서 요약, 조례·지침 검색, 복지·허가 서류 사전검토, 민원 답변 초안 작성처럼 피로도는 높고 반복성은 강한 업무부터 시작해야 한다.
- 결국 GovTech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행정 철학이다.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AI가 아니라, 빨라진 민원 처리, 정확한 안내, 덜 복잡한 행정이다. AI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무원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행정 개혁 도구다.

